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9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29일 (음력 2월 23일) 금요일

광주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 무더기 파면-해임

지난해 광주시교육계를 뒤흔친 '스쿨미투' (#MeToo·나도 당했다)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면했을지라도 교육부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포괄적인 행정처벌이 적용되면서 징계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넓고 수위도 높았다.

중징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청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1차 징계심의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원에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심의 결과, 심비위 대상 38명 가운데 중징계는 18명으로 파면 6명, 해임 8명, 정직 4명 등이다. 경징계는 모두 4명으로 감봉 2명, 견책 2명이다. 나머지 교사 가운데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1명은 경고, 11명은 자체 종결, 2명은 보류 결정됐다.

교육청 심의에 앞서 구속기소돼 이미 파면된 2명을 더하면 이번 스쿨미투로 파면된 교사는 모두 8명으로 늘게 됐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A교의 경우 34명이

2개교 36명 중 파면 6·해임 8 요구...중징계만 18명

기소-성추행→파면, 그 밖의 비위 행위→해임 결정

해당 교사들 소청 심사 예고...행정소송도 배제 못해

수사 대상에 올라 1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나머지 23명은 정직이나 경징계, 또는 경고나 자체 종결, 보류 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교에서는 4명이 수사를 받아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됐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벼운 나머지 1명은 감봉 처분됐다.

교육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추행·성희롱·부적절 언행의 경중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징계 기준과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통보 등을 고려해 기소됐거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교원에 대해서는 파면, 그밖의 성 비위행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성추행·성희롱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욕설, 체벌

행위가 중대한 경우는 중징계 중 하나인 정직 처분을 내렸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욕설, 체벌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감봉, 경미한 경우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교사 중 상당수에 대해서도 무관용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과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2017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비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돼 있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본적 판단에 따

른 것이다.

또 2015년 대법원 판례는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사학법원과 학교 측이 그대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사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징계수위를 조절하려나도 교육청이 강제로 이를 통제할 근거가 없는 데다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 이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징계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학교들이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상태에서 복귀 등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중징계 대상 교사 중 일부가 소청 심사를 통해 감경될 수도 있어 교단 복귀 교사는 좀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Photo 漫評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이 27일 0원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의 기조에 부합할 수 없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기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원외 지역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부모님에게도 찌질이 라고 말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인 금기를 부모님 연배의 분에게 거리낌 없이 내뱉은 이 의원은 패륜적 행위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흉량물로 만드는 미꾸라지같은 존재라며 부끄러움을 동시에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 생명을 죽이는 이 의원의 혀를 우리는 단는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 사진 = 뉴시스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성공... '남방형' 청년창업모델

핵심시설 2020년 상반기 착공...2020년 완공



- 1 스마트 육우장
- 2 지역주민 참여형 스마트팜 단지
- 3 스마트산실센터(스타트업, 체험, 지원센터)
- 4 스마트팜 실증단지(빅데이터, 테스트베드)
- 5 물 저장탱크(빗물 및 용수 공급)
- 6 빗물 저수조 및 필터
- 7 실습농장(교육형, 경영형)
- 8 청년창업 보육센터(교육시설)
- 9 공동 주차장(화물 하역)
- 10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 11 스마트 배자천, 에너지 처리시설
- 12 APC시설(가선) : 선별, 포장, 유통
- 13 청년 농촌 보육차리 주택(차로 5분거)
- 14 차적산입센터 : 차로 3분거리
- 15 선도 농업경영체 단지(총영양농조합)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된 고흥만 간척지 일원 조감도.

전남도가 재도전 끝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가 성공했다.

대한민국 대표 '남방형 스마트팜'으로 조성되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세계적인 청년 창업 모델로 육성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전에서 전남 고흥만 간척지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총 사업비 1056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완공목표인 스마트팜 밸리는 청년창업 보육센터 4.5ha,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6ha, 주민 참여형 단지 6ha, 기술혁신단지 4.5ha 등 29.5ha(핵심시설 22ha?주민참여단지 7.5ha) 규모로 조성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의 기능이 집약화된 첨단농업의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으로전남도는 청년농업과 창업농 등 청년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위해 뛰었다.

청년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적정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 보는 실증단지가 핵심시설로 조성된다.

또 원예단지 기반조성, 유통시설, 농촌 주거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연계사업 형태로 패키지로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남방형 스마트팜 모델을 육성한다.

이월대 작물 위주로 수입대체 품목을 육성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양액, 시설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혁신밸리 인근에 예비창업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주거와 지역 멤버십 카드 등을 통합, 연계해 청년 농업인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풀업한 이후에도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은 따뜻한 기온과 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기후환경이 스마트팜에 적합하고 넓은 간척지가 있어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청년들이 정착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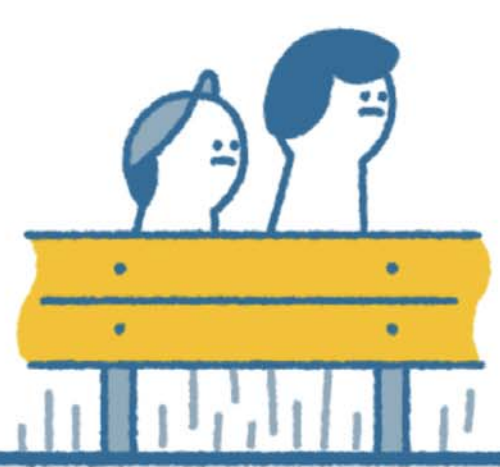
특히 혁신밸리 인근에 창업·창업 지원이 가능한 창업 예비단지(30ha) 조성, 다수의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창농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고흥군과 연내에 기본 및 실시 계획 수립·승인, 기반공사를 실시하고 핵심시설은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사람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